

# 제22대 총선 기획: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 토론회

일시: 2024년 3월 29일(금) 09:30~11:40

주최/주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발표	각 정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토론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권승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항주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센터장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

# Executive Summary

본 토론회는 대전환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길을 만들기 위한 제22대 국회를 준비하고, 각 정당에 ESG 정책질의 및 답변을 받아 이를 공유하는 자리임. 답변을 비교 및 평가하며 더 나은 ESG 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활발하게 공유됨

## key takeaway 1

### ESG 정책질의

- ESG 정책 질의는 총 14개의 문항이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의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토론회에서 공유함
-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은 소비자, 정부, 기업, 금융기관, 투자자, 평가기관의 역할을 알고, 주체 간의 상호작용 파악 이후의 법, 제도, 정책의 도입으로 가능함
- 14개의 정책 질의 문항은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하기 위한 핵심 방법임

## key takeaway 2

### ESG 정책질의 주요 답변

-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는 모든 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국민의 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ESG 공시기준을 토대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함
- ‘ESG 금융 공사 설립’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긍정적이었으며, 반대 의견으로 기존의 산업은행의 녹색투자 은행으로의 전환이 공약에 있었거나(녹색정의당), 별도의 ESG 공사의 존재는 산업은행의 ESG 전환 동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새진보연합)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각 정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제 22대 총선 : ESG 정책질의 각 정당 답변 비교표**

이벤트	ESG 정책 질의 문항	국 민 의 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 보 당	개 신	혁 당
1	ESG 기본법 제정	X	●	●	●	●		미계속
2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	●	●	●	●		
3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X	●	●	●	●		
4	지속가능 공급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X	▲	●	●	●		
5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택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	●	●	●	●		
6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마련	▲	●	●	●	●		
7	모든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추후권 확대(국가재정법 개정)	X	●	●	●	●		
8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	▲	●	●	●	●		
9	공적연기금 및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과 이행	X	●	●	●	●		
10	ESG 금융공사 설립	X	●	X	X	●		
11	스튜어디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	●	●	●	●		
12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X	●	●	●	●		
13	기업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대한 입장	X	●	●	●	X		
14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입장		기업재생에너지 조달 연선택티브 정책 강화 미표시 찬성	●	●	●	X	
			기업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 미표시 찬성	●	●	●	X	
			중소·중견 재생에너지 구매지원 미표시 찬성	●	●	●	●	
			기업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미표시 찬성	●	●	●	●	

※ 표시 구분 : ●(찬성) / X(반대) / ○(한시적 찬성) / ▲(한반 명확하지 않은 의견 개진 = 결과적으로는 반대의 취지로 읽힘) / 미표시 찬성(각 항목에 찬반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상위 질문에 찬성으로 표시한 경우)

출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① ESG 기본법 제정

2016년 총선 때 ‘사회적 책임 기본법’ 제정 요구가 시초가 되어 ‘ESG 기본법’으로 발의함. ESG 기본법에는 정부의 역할, 공시, 지원 정책, 공적 금융기관의 자금공급과 연기금 투자, ESG 워싱 방지 등이 규정되어 있음

(국민의 힘)

ESG 경영 의무화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정부가 법률로 의무화하기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에 중점 할 필요가 있다고 함

(더불어민주당)

ESG 기본법을 추진하지만, 산업, 환경, 정무, 노동 등 다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및 상임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녹색 정의당)

녹색산업전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연계한 입법화가 필요하고, ESG 포럼을 1년간 운영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음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각 정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진보당)**

ESG 평가에 대한 공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고, 환경, 사회 문제는 노동조합,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해야 함

**②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국민의힘)**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ESG 공시기준을 토대로 공시 추진 시기, 대상기업, 추진 방법 등을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결정이 필요함

**(더불어민주당)**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Say on Climate' 제도 활성화 등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도입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녹색정의당)**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 의무 적용 시점을 2030년에서 1~2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새진보연합)**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발의할 것임

**(진보당)**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것임

**③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 제정**

**(국민의힘)**

아직 EU 법안 제정 여부가 미확정이고 국내에서 먼저 추진할 경우 기업 부담이 됨. 국내기업의 경우 복잡한 원-하청 관계, 중국-인도-동남아 등 개도국에 제조업 공급망 배치 등 기업구조 감안 시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추진하되, 단계적 접근과 확대가 필요함. EU의 진행 상황 및 보완 사항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각 정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 (녹색정의당)

ESG 기본법 포럼을 1년간 운영해 조정하겠음. 입법화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2.12)’의 이용 실태와 효과성을 평가해 입법과제를 도출하겠음

### (진보당)

위반 시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에 그치는 기존 제출 법안에서보다 책임 요건이 강화된 한국판 ESG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하겠음

### ④ 지속가능공공조달 의무화(조달사업법 개정)

### (국민의힘)

중소기업에 대한 ESG 지원 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수준에 올랐을 때 도입할 수 있음

### (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직접 적용을 위해서는 ESG 평가체계와 인증제도가 수립되어야 가능함

### (진보당)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기초해 추진하고, 반ESG 사건이나 반 기후 사건 연루기업 등에 조달 참여 자격을 미 부여를 고려하겠음

### ⑤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및 로드맵 수립

### (국민의힘)

현 정부의 기조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선진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겠음. 22 대 국회에 기후 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겠음

###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 수립을 위한 모범 기준을 마련하겠음

### (녹색정의당)

탄소중립기본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사회책임투자 채권 등에 대한 실행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각 정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새진보연합)**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음

**(진보당)**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정책 및 법안을 마련하겠음

**⑥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마련**

**(국민의힘)**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ESG 펀드공시 기준이 시행 초기인 만큼 공시기준의 시행 성과 펀드시장의 규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더불어민주당)**

금융기관의 투자·금융상품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음

**(녹색정의당)**

금감원이 2024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ESG 펀드 공시 기준' 적용을 분석해, 규제안을 작성하겠음

**(진보당)**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 제도를 확립하고 시행하겠음

**⑦ 모든 공적 연기금의 ESG 고려 의무화 및 주주권 확대**

**(국민의힘)**

공적연기금의 자산운용 방향은 해당 연기금의 여유자산, 자산시장 동향, 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 ESG 투자를 법으로 의무 규정할 경우 자산운용 제약이 우려됨. 현재도 자산운용평가지 ESG 투자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기업 ESG 공시 의무화 환경 조성,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 마련 등 실행체계 구축이 조속히 추진 필요함

**(녹색정의당)**

'ESG 4법'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추진할 것임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각 정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 (진보당)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금융배출량 공시대상으로 규정하겠음

#### ⑧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

### (국민의힘)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는 BIS 국제기준 등에 부합하는 국제정합성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자산 건전성 평가와 관련한 국제기준이 부재함. 국제기준 논의 동향을 보며 논의, 검토, 준비가 필요함

### (더불어민주당)

금융 부문의 기후리스크에 대한 회복능력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방식을 추가 검토하겠음

### (녹색정의당)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2021.12)에 따른 은행의 자율적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음

#### ⑨ 공적연기금 및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선언 및 로드맵 수립과 이행

### (국민의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서구 금융권의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탈퇴하는 상황임. 한국의 경제 및 산업환경 상 해당 법안 추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음

### (녹색정의당)

ESG 기본법을 검토하고, 공적연금에 녹색금융 시행 현황을 분석하겠음

진보당(찬성) - 국민연금 넷제로 기초연구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음. 금융배출량 감축 및 넷제로 바탕으로 2030 감축목표 설정 및 근거, 금융 배출집약도, 감축목표, 넷제로 시점 등을 국민연금에서 연구 용역을 한 상태임

#### ⑩ ESG 금융 공사 설립

### (국민의힘)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ESG 센터 신설 등 ESG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 운영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음.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두 배 확대하여 녹색채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투자펀드 조성 등에 투자함으로써 기후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음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각 정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 (더불어민주당)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기존에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타 기관들과의 조율이 필요함. 추진 방식은 21대 국회에서 기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추가 법안 발의 추진할 것임

### (녹색정의당)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해서 그린노믹스 추진을 공약화함

### (새진보연합)

취지는 공감하나, 별도의 ESG 공사 존재는 산업은행의 ESG 전환 동력 약화로 작용함. 산업은행의 ESG 자본조달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 ⑪ 스튜어드십 코드 모니터링 기구 설치

#### (국민의힘)

국제적으로 민간 자율 규범으로 운영해 자율성을 존중함. 이행점검 여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함

#### (더불어민주당)

어떤 형태의 모니터링 기구·조직이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음

#### (녹색정의당)

ESG 기본법 포럼을 운영해 조정하고, 2018년에 시작한 국민연금 현황분석 해 내용을 보완하겠음

### ⑫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 설치

#### (국민의힘)

공정위, 환경부, 소비자원 등에서 그린워싱 관련된 규제 지침을 만들고 시행 중임. 추가적인 ESG 워싱 방지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할 경우, 시장에 너무 많은 규제기관의 등장으로 소비자 및 기업의 불편을 일으킬 수 있음. 3개 기관에서 각각 시행 중인 그린워싱 관련 규제 기능을 통합해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민주당)

공정위 표시광고법, 환경부의 환경기술산업법 등을 개정해 추진하겠음

### ⑬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반영한 전력망 탈탄소화 목표 수립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각 정당의 ESG 정책 질의 답변 비교 및 평가

### (국민의힘)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전력 분야 탈탄소화에는 한계가 존재함.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해외 대비 높아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춰가는 정책적 노력과 재생에너지 거래 편익을 위한 녹색 프리미엄, PPA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녹색정의당)

탄소중립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 등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겠음

### (새진보연합)

2035년 이내 재생에너지 60% 전환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진행하고, 전환 수익 일부를 전 국민에게 녹색 배당으로 지급하겠음. 국가재정투자 및 기후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전환 자본을 마련할 것임

### (진보당)

전력 PPA 확대는 전력 민영화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지점임. 기업 차원에서 건설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 ⑭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입장

구체적 사안은 ‘조달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제도 도입’, ‘중소·중견기업 구매지원’, ‘정보 투명성 제고’임

### (국민의힘)

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접 PPA를 확대하도록 장려할 것임. 공약에 반영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계획 중인 부분도 존재함

### (새진보연합)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은 낮은 재생에너지 전환율에 기인함.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가능하나, 재생에너지 전환 비중이 높아지면 기업에 구매 편익을 제공하는 대신 일반 재생에너지 효율과 분산 전력망의 안전성 강화가 더욱 효용이 높을 것임

## 토론

### 박태우 진보당 정책국장

정부의 원전 지원 특별법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차단하는 것임.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 등의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 정치임. 기후위기에 대한 기업 책임을 따져봐야 함. 상위 1%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1.4%이고, 이를 상위 10%로 확대하면 77.7%임. ESG 정책은 투자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음. 현장의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기업의 책임도 정확히 규정하는 ESG를 만들어가야 함. 집권당의 공약으로 배출권 할당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으로 녹색금융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산업계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부적절함

### 박항주 녹색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 대응센터장

ESG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급망 심사는 하청 기업 등이 연관되어 있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ESG 정착 방식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음. 화평법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대기업은 화학물질 담당자가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없었던 것임. 이는 ESG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화평법이 후퇴한 사례를 ESG가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됨

### 권승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ESG 금융 공사 설립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산업은행 역할에서 어느 정도 ESG 금융을 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함. 이런 과정은 녹색 금융, ESG 금융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화가 이루어질 것임. 이번에도 기후위기위원회가 있었지만, 실제 역할을 하지 못함. 22대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예산, 심사, 평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22대 국회에서는 ESG의 틀을 만들 때 포럼, 위원회 구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임

### 조사 및 작성



김경훈 RA  
rlarudgns22@gmail.com

### 디자인



임팩트온 이승진 디자이너  
im.code@impacton.net